**[주간동아] "착하면 돈 버는 ‘흥부자본주의’ 실현"**

**인터뷰 |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2013-7-15

“책임투자로 미래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의 신념이다. 2007년 KoSIF 창립 이후 김 이사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전통적 투자 결정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인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왔다. 7월 2일 KoSIF가 국회에서 연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이 함께 한 이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을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KoSIF는 사회책임투자(SRI)의 ‘허브’ 구실을 하며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해온 비영리단체다. 2008년부터는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CDP)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책임투자는 자본주의 위기 수습할 묘책**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의 평화와 영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 이사장을 7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 이사장은 1997년 일본 경제학자들이 뽑은 ‘애덤 스미스 이래 100대 경제학자’에 꼽히기도 한 석학이다. 한국CSR(기업의 사회적책임)표준화포럼 회장 및 유한대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단국대 석좌교수로 있다.

김 이사장은 “2012년 이후 공공성을 높이는 책임투자를 하면 수익이 높아진다는 분명한 증거가 수치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405조9000억 원대의 국민연금기금이 책임투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기업문화나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3/07/15/201307150500003/201307150500003_1.html>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61

**[주간동아] ‘국민연금’ 책임투자 선도 부탁해**

**착한 투자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독려 위해 법개정 추진**

2013-7-15

돈은 투자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엔진과 윤활유 구실을 한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거나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들이 어떤 투자 철학과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적 명제를 종종 망각하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버린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그런 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이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책임투자(SRI) 지수인 ‘도미니 사회지수 400’(DSI400)을 창안한 에이미 도미니도 세상이 이토록 궁색해진 것은 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아서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투자를 바람직한 가치와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책임투자 혹은 책임투자(RI)는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한 투자 철학이자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파이더맨**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투자계의 스파이더맨이다. 2013년 3월 기준 기금 405조9000억 원을 운용하며, 일본과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인 GPIF와 GPF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한다. 내년 말 기금 규모는 48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투자에 111조1000억 원(국내 75조6000억 원), 채권투자에 260조 원(국내 채권 240조9000억 원), 대체투자에 34조3000억 원을 배분했다. 2018년까지는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각각 30%와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어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 대통령이 가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글로벌 금융기관 수장들이 국민연금 이사장이 가면 나타난다는 말은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넘어 투자 대상인 기업, 더 나아가 국민 경제, 사회 변화와 연동돼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해왔다. 2006년 최초로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기금 일부를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하면서 3월 말 현재 5조5390억 원을 투자한다. 연기금과 공모펀드 등을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시장 전체 규모인 7조5000여억 원의 73% 이상이 국민연금기금이다. 국민연금은 ‘2012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고서 개정판’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더욱 확대해 금융시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3/07/15/201307150500001/201307150500001_1.html>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60

**[주간동아] ‘속 빈 강정’ 국민연금 책임투자**

**운용사 투명 공시 - 대기업 위주 주식형 투자 탈피해야**

2013-7-15

‘밀어내기’ 횡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8일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주에게 제품을 강매하고 욕설을 퍼부은 영업사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남양유업의 ‘갑(甲)질’은 도리어 부메랑이 돼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 사태 직전인 5월 6일 111만7000원이던 이 회사 주가는 6월 25일 84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반 기간에 주가가 약 24% 떨어진 것이다. 매출도 15% 이상 급감했다. 비재무적, 비시장적 요소로 여겨졌던 사회책임 문제가 기업의 재무상황을 크게 악화시켰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안겼다.

문제는 이 사안이 남양유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공적인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남양유업의 지분 5.4%(4월 말 현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돈을 사회책임 논란을 일으킨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지분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가 남양유업에 직접 투자한 지분은 0.36%이고, 5.04%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외부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원래 남양유업은 우량기업이었고, 갑을논쟁으로 불똥이 튄 것일 뿐 큰 문제없다”며 수익이 최우선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주가 떨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이런 사회책임 문제는 남양유업 사례만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의 크고 작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 이슈가 터져 나온다. 삼성전자(경기 화성-불산 누출), LG실트론(경북 구미-불산 누출), SK하이닉스(충북 청주-염소 누출) 같은 기업들은 환경 이슈를 겪었다. SK그룹과 CJ그룹은 오너가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며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드러냈다. 이들 기업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적지 않은 지분을 투자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무적 여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ESG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K씨는 “투자하기 전 그 기업에 대해 더 면밀하게 알아봐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혼을 내고, 사고 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건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연기금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3/07/15/201307150500000/201307150500000_1.html>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59>

**[데일리 팜]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운용 투명성 강화 입법 추진  
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13-08-18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와 자산운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dailypharm.com/News/174187>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58

**[건설경제신문] 公共공사 입찰때 사회적 책임 가점 등 '착한 기업' 수주 유도**

기사입력 : 2013-08-19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건설공사 발주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이른바 ‘착한기업’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 점수에다, 사회적책임 가점을 얹어 종합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새 입찰제도의 핵심은 사회적책임이다. 기재부는 공정거래, 고용, 안전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입찰기업들을 평가해 낙찰자 선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가점을 얼마나 배정할 지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8161055120780203>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57

**유럽, 착한기업공시 의무화..찬반 '팽팽'**

기사입력 : 2013-08-13

유럽에서 착한기업 공시 의무화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공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과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유럽위원회(EC)는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회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실적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한다.

대상은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계 2000만 유로 초과, 수익 4000만 유로 초과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은 재무적 정보와 함께 고용, 인권보호, 반부패, 뇌물수수, 이사회의 다양성과 같이 기업의 '착한경영'사례도 열람할 수 있게된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0917235713449&nvr=Y>

http://www.kosif.org/board/bbs/board.php?bo\_table=latest&wr\_id=1656